

2015 지방직 공채

지방자치론

해설위원 : 김 만 희 교수

본 문제의 해설 소유권 및 판권은 김만희 교수에게 있습니다.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-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[2015년도 지방직 7급 B책형 공개경쟁채용 해설]

해설 : 김만희 교수(공단기 행정학 전임)

<총 평>

<난이도 분석>

<경향 분석>

<특이 사항>

<앞으로 수험 대응 방향>

문 1.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- ㄱ.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
- ㄴ. 주민투표법
- ㄷ.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
- ㄹ.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

- ① ㄱ→ㄴ→ㄷ→ㄹ
- ② ㄱ→ㄴ→ㄹ→ㄷ
- ③ ㄴ→ㄷ→ㄱ→ㄹ
- ④ ㄷ→ㄱ→ㄹ→ㄴ

정답 : ②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15

<분석 해설>

- ②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「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(1999) → 참여정부 때 「주민투표법」(2004) → 이명박 정부 「주민소환에 관한법률」(2007) → 박근혜정부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약칭: 지방분권법) (2013)의 순서로 제정되었다.

문 2.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1949년 제정된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, 시·읍·면장은 각 시·읍·면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.
- ② 1960년 12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다.
- ③ 1961년 제정된 「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」으로 군(郡)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.
- ④ 1998년 '6.4 지방선거'에서 처음으로 '전국동시지방선거'를 실시하여,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였다.

정답 : ④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36

<분석 해설>

- ④ 1998년이 아닌 1995년 기초·광역자치단체 의원 및 장에 대한 4대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.
- 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·읍·면장은 의회에서 간선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였다.
- ② 1960년 서울특별시·장·도지사·시·읍·면장의 직선제 전환과 총선거를 실시하였다.

문 3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- ② 지방의회의원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규정된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.
-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④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.

정답 : ③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110

<분석 해설>

- ③ 30일 이내가 아닌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「지방자치법」 제45조(임시회)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① 동법 제44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- ② 동법 제35조(겸직 등 금지)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
5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
- ④ 동법 제55조(의장불신임의 의결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.

문 4. 헌법상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는?

-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
- ② 지방이양추진위원회
- ③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
- ④ 기능이양합동심의회

정답 : ①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19

<분석 해설>

- ① 현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개편 기본방향 추진기구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.
「지방분권추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한 '지방분권추진위원회'와 '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'에 따른 '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'를 통합하여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는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을 근거로 5년간 존속기간(법 제 52조)을 둔 한시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의 '지방자치발전위원회'를 2013년 5월 설치하였다.

문 5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'보조기관'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소방기관
- ② 출장소
- ③ 부지사
- ④ 사업소

정답 : ③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47

<분석 해설>
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10조에 의해 부지사·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한다.
- ① 소방기관, 출장소,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.
동법 제113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동법 제115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④ 동법 제114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문 6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.
②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(市)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.
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.
④ 광역시에 군(郡)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곳도 있다.

정답 : ②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64

<분석 해설>

- ②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.
「지방자치법」 제3조 ③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, 군에는 읍·면을 두며, 시와 구(자치구를 포함한다)에는 동을, 읍·면에는 리를 둔다.
- ①③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 1계층을 채택하고 있다.
④ 인천광역시 옹진군,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.

문 7. 「지방자치법」 상 시(市)·읍(邑)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(市)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.
② 시(市)·읍(邑)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률로 정한다.
③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(郡)은 도농(都農)복합 형태의 시(市)로 할 수 있다.
④ 읍(邑)이 없는 도농(都農)복합 형태의 시(市)에서 그 면(面) 중 1개 면(面)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(邑)으로 할 수 있다.

정답 : ②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64

<분석 해설>

- ②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「지방자치법」 제7조(시·읍의 설치기준 등)
④ 시·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① 동법 제7조 1항
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③ 동법 제7조 2항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(都農)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.
1.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
2.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
3.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.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4.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,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,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
- ④ 동법 제7조 3항
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.

1.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
2.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

문 8. 「지방재정법」 상 지방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감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정답 : ②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233

<분석 해설>

- ② 동법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
- ① 동법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동법 제48조의2(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·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④ 동법 제39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문 9. 지방세 중 도(道)세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담배소비세
② 지방소득세
③ 지방소비세
④ 자동차세

정답 : ③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141

<분석 해설>

- ③ 지방소비세가 도세의 보통세에 해당한다.
①②④ 담배소비세, 지방소득세, 자동차세는 특별시·광역시세에 해당한다.

● 지방세목 ●

	특별시·광역시세	자치구세	도세	시·군세
보통세	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	등록면허세 재산세	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	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
목적세	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		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	

문 10. 조례와 규칙의 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(還付)하고 재의(再議)를 요구할 수 있다.
③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

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.

- ④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정답 : ①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43

<분석 해설>

- ① 10일이 아닌 5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.
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결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.
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7조(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.
- ④ 「지방자치법」 제24조(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)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문 11. 「지방재정법」 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②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지방의회의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.

정답 : ④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359

<분석 해설>

- ④ 동법 제37조의2(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)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- ① 동법 제36조의2(성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)
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② 동법 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- ③ 동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,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문 12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.
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.

정답 : ③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47

<분석 해설>

-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「지방자치법」 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②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「지방자치법」 제27조(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.

문 13.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다.
②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, 여비, 월정수당이 지급된다.
③ 지방의회의원은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.
④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정답 : ③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108

<분석 해설>

- ③ 「공직자윤리법」에 의한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한다.
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(등록의무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(이하 "등록의무자"라 한다)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.
1. 대통령·국무총리·국무위원·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
2.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
① 「지방자치법」 제31조(지방의회의원의 선거)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.
제32조(의원의 임기)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④ 「지방자치법」 제88조(징계의 종류와 의결)
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문 14. 「지방자치법」 상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혀 인정되지 않는 권한은?

- ①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권
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
③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
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

정답 : ②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111

<분석 해설>

- ② 우리나라는 지방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의회해산권과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.

●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와의 관계 ●

자치단체장의 권한	지방의회의의 권한
의안 및 예산안의 발의	심의·의결권
조례의 공포	조례의 공포대행(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때)
조례에 대한 재의요구	재의요구 시 재의결(조례로 확정)
선결처분	선결처분에 대한 승인
임시회 소집 요구	임시회 소집
재의결된 조례에 대한 제소	행정사무감사, 행정사무조사, 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조 요구, 자료제출요구, 의견표시

문 15. 다음 ㉠, ㉡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?

「지방자치법」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
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(㉠)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(㉡)으로 정한다.

㉠

㉡

- | | |
|------|------|
| ① 법률 | 대통령령 |
| ② 법률 | 규칙 |
| ③ 조례 | 대통령령 |
| ④ 조례 | 규칙 |

정답 : ㉠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69

<분석 해설>

- ①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**법률**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**대통령령**으로 정한다.

문 16.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주민소송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.
- ④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.

정답 : ㉢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226

<분석 해설>

- ③ 모든 사항이 아니다.

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(주민소송) ①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,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,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·임차·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·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·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-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"19세 이상의 주민"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(청원서의 제출)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

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(주민의 감사청구) ②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.

문 17. 「지방공기업법」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·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공사의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.

정답 : ㉡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

<분석 해설>

- ② 임기는 2년이 아닌 3년으로 한다.

동법 제59조(임기 및 직무) ① 공사의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- ① 동법 제5조(지방직영기업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·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- ③ 동법 제53조(출자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증자(增資)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④ 동법 제10조의2(기업 직원)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.

문 18.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둔다.
- ② 교육의원은 시·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.
- ③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- ④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.

정답 : ㉢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113

<분석 해설>

- ③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6조(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)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.

- ① 동법 제4조(교육위원회의 설치)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(이하 "교육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동법 제6조(교육위원의 지위와 권한) ① 교육의원은 시·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.

- ④ 동법 제10조의2(교육위원의 소환) ①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.

문 19.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 받는 행위는 할 수 있다.
- ②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.
- ③ 「공직선거법」 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

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정답 : ①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228

<분석 해설>

- ①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명 또는 날인 받는 행위는 할 수 없다.
「주민투표법」 제22조(투표운동의 제한)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1.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
 2.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
 3.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통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
 4.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
- ②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 대상의 제외사항에 해당한다.
「주민투표법」 제7조(주민투표의 대상)
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.
1.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
 2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
 3.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회계·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 4. 행정기구의 설치·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·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
 5.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. 다만,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6. 동일한 사항(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
- ③ 「주민투표법」 제5조(주민투표권)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.
- ④ 「주민투표법」 제9조(주민투표의 실시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문 20. 지방자치단체인 A군(郡)과 B군(郡)이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'행정협의회'를 구성하고자 할 때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A군수와 B군수는 행정협의회회의의 구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협의회회의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군과 B군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③ A군과 B군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양 군(郡)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정답 : ①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p274

<분석 해설>

- ① 시·군·구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(행정협의회회의의 구성) ① (생략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동법 제153조(협의회회의의 조직)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③ 동법 제152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하여야 한다.
- ④ 동법 제152조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